

반도체 초격차 빛났다
삼성·하이닉스
고성능 제품 인기
04

고급 오마카세 vs 편의점 도시락

대출 유무 따라 빈부격차 심화 청년들 이자 폭탄에 허리띠 꽉

최근 2년 동안 기준금리가 3.0%포인트나 상승했다.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세대부터 6070세대까지 금리인상의 빛과 그림자를 따라가 봤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편집자주〉

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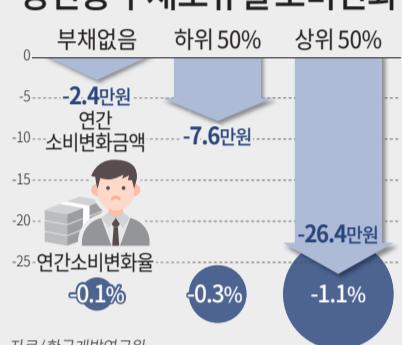
〈上〉 2030세대

부채없는 상위층 이자소득 증가
주거대출 하위층 빚 갚느라 허덕
금리 1%p 오르면 소비 30만원 ↓
장기간 채무상환 기회 확대 필요

#. 직장인 A씨는 최근 고급 코스요리를 먹는 재미에 빠졌다. 최근 두달간 찾은 오마카세(맡김 차림)식당만 10곳이다. 가격대는 5만원 안팎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A 씨는 “단순히 한끼 식사가 아니라 취미생활로 생각하니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며 “유명 오마카세 식당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 직장인 B씨는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리 도시락을 산다. B씨는 현재 월급 중 50만원으로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미용, 의류비를 해결하고 있다. B씨가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가 만만치 않아서다. 그는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전계약(4년전)보다 보증금을 더 올려 이사하게 됐다”며 “보증금이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이자부담은 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청년층 부채보유별 소비변화



29만9000원.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인상할 경우 20대 청년이 1년 간 줄여야 하는 돈이다. 지난 2021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로 3.0%p 인상했다. 1년 간 89만 6000원, 매달 7만5000원가량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청년들이 소비를 줄인 이유는 단순하다. 그만큼 소득이 줄었거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 고용 하향평준화에도 빈부격차 ↑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가구주)의 소득수준은 1000만~3000만원미만 42.3%, 3000만~5000만

원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다. 2019년보다 1000만~3000만원미만(39.2%) 비중은 늘고, 3000만~5000만원미만(34.4%) 비중은 감소했다. 5000만~7000만원미만이 같은 기간 12.7%에서 8.2%에서 감소한 것으로 봤을 때, 20대 평균 소득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고용계약은 안정적이지도 않다. 연소득 1000만~3000만원미만 가구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41.3%, 기타(무직) 44.4%였다. 20대 청년가구 10명 중 4명은 주로 임시·일용근로자나 기타(무직)업종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자산은 늘고 있다. 지난해 20대 평균 자산은 1억 3498만원으로 2019년 1억 994만원보다 22% 증가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평균 자산이 3억2638만원에서 4억 1246만원으로 26% 늘었다.

문제는 이들의 자산 대부분이 상위 20%에 솔려 있다는 것. 2030세대 하위 20% 평균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1만원 늘었다. 반면 상위 20% 평균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1141만원 증가했다. 자산은 매월 급여로 들어오는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늘어난 자산격차 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또 오르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kW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꽂혀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

/뉴스

전기·가스로 오늘부터 인상

4인가구 기준 月 7400원 ↑

4인 가구 기준 전기 요금이 월 3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4400원 올라 매달 7400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전기요금은 16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인상한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한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인상분 1년 유예, 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 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생활자에게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리튬 확보나선 K-배터리, 中 의존도 줄이기 사활

칠레 리튬 국유화로 국제가격 상승 핵심자원 민족주의 우려 예의주시

배터리 제조 핵심 원료로 꼽히는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가 배터리 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생산국가가 몇몇 국가로 한정된 자원인 리튬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고 있는 주요 광물이기도 하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단일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장기 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리튬의 안정적인 수급을 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리튬은 최근 칠레의 ‘리튬 국유화’ 선언에 국제 가격이 9% 가까이 올랐다. 배터리 업계는 당

장에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서 배터리 가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터리 업계는 고객과 주요 원재료에 대한 판가 연동 작업을 대부분 마쳐 손의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자재 가격의 심한 변동은 부담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리튬의 경우는 배터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원자재임에도 중국산의 비중이 커 배터리 업체의 리튬 수급 다각화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중국산 비중이 90%에 육박

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한 상황이며, 수입액 역시 21억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90.3%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분기만 봐도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18억2000만달러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게다가 리튬 보유국 중 하나인 칠레도 정부가 리튬 생산을 담당하는 국유 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해당 산업의 국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서 자원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광물은 원래 국가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개인의 소유가 된 적은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세밀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를 가진 국가들이 ‘자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향후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단일국 수입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장기 구매 계약 체결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SK온은 SQM으로부터 5년간 수산화리튬 5만7000톤을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레이크리소스에 지분 10%를 투자하며 10년간 아르헨티나 염호의 고순도 리튬 23만톤을 확보한 바 있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전경련, 국민의힘에 상속세율 인하 등
10대 정책과제 건의

/사진 뉴시스

▲ 정부, 항만물류 규제개선…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 간소화 등

▲ 선관위 사무차장 딸, 충북 선관위 면접 위원 3명에 만점… ‘특혜 채용’ 의혹

▲ 전여옥 “문재인 前 대통령이 한전을 뭉개버렸다”



▲ 이재명, 김기현 ‘李 코인투자’ 주장에 ‘전수조사하면 될 것’ /사진 뉴시스

▲ 한미일, 이번주 G7 회의서 정상회담 개최… 北도발 재개할까